

빅데이터 산업 관련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 방향

2015. 7. 8 (수)



방송통신위원회
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엄 열

Contents

1장 가이드라인 제정 배경 및 목적

2장 가이드라인 추진 경과

3장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

4장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 방향



1장

가이드라인 제정 배경 및 목적

1. 제정 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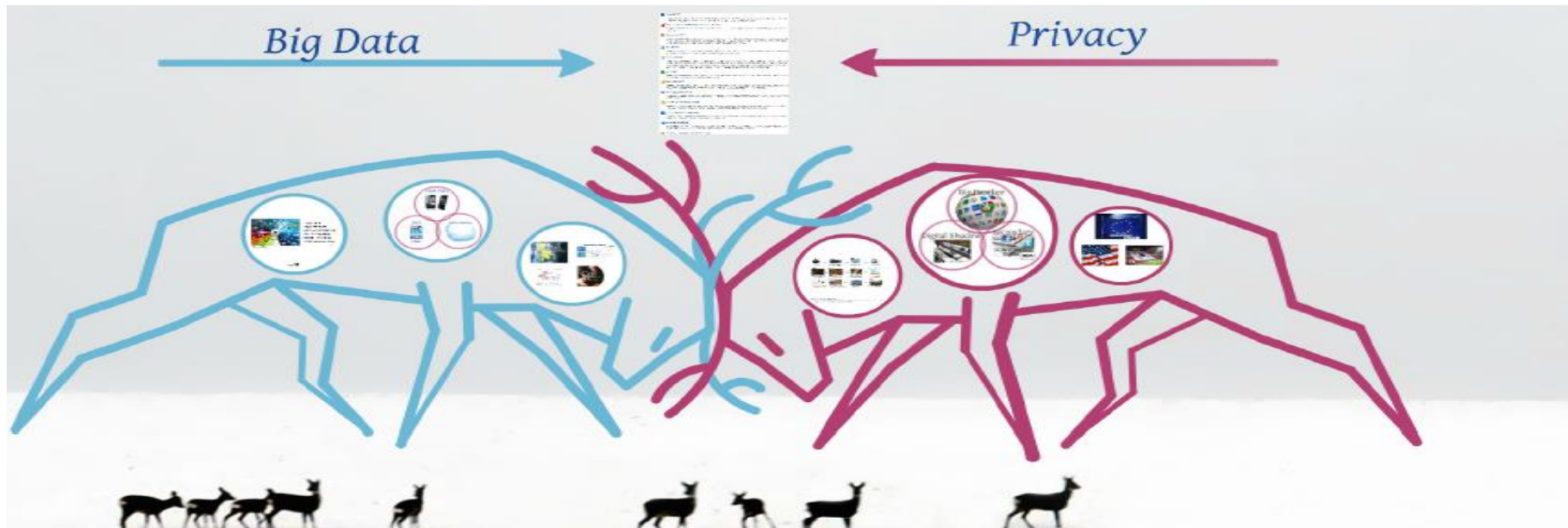
- ❖ 기업은 빅데이터 분석을 최대한 활용, 맞춤형 서비스/기업 수익 연계
 - 스포츠, 금융, 통신, 의료, 카드, 부동산,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는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타겟 마케팅으로 수익 극대화를 추구
- ➡ 반면,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수집,이용되어 사생활 침해 가능성 증대
 - [우려 1] 美, 유통업체가 이용자의 구매이력을 분석하여 임신부용 쿠폰을 발송하여 여고생의 임신 사실을 부모보다 먼저 알아내어 마케팅에 이용
 - [우려 2] 얼굴 인식 기술이 기기와 연결되어 축적될 경우, 심각한 사생활 침해 가능
 - [우려 3] 범죄예측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생하지 않은 사건임에도 범죄자예정자로 분류



2. 제정 목적 :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적 접근

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개인정보 수집·이용의 투명성 확보

- **현행 법률에서 명확히 규율하고 있지 않은 빅데이터의 조합, 분석, 생성과 관련하여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방안 제시**
- **사전 동의획득이 곤란한 정보의 수집·이용에 대하여 비식별화 조치를 의무화**하고 수집 사실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



2장

가이드라인 추진 경과

1. 추진 경과

- ❖ 2013. 7~9월 : 연구반 운영 / 2013.12.13 : 초안 마련
- ❖ 2013. 12. 18 : 제1차 토론회 (미래부 · 방통위 공동 주최, 빅데이터 페어)
- ❖ 2014. 1. 9 : 시민단체 의견 검토 및 수정안 마련
- ❖ 2014. 3~11월 : 각계 의견 수렴 (사업자, 시민단체, 학계, 법조계 등)
 - 2014. 3. 19 : 제2차 토론회 (방통위 주최 · KISA 주관,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세미나)
 - 2014. 6. 16 : 제3차 토론회 (방통위 주최 · KISA 주관,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세미나)
 - 2014. 11. 20 : 제4차 토론회 (방통위 주최 · KISA 주관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세미나)
- ❖ 2014. 11. 28 : 최종안 마련
- ❖ 2014. 12. 23 : 제정 / 2015. 1. 1 : 시행
- ❖ 2014. 2. 27 : 사업자 대상 설명회 개최

3장

가이드라인 주요 내용

1. 주요 내용

1 정보의 수집 시부터 식별정보에 대한 철저한 비식별화 조치 적용

- ▣ 정보의 수집 시부터 비식별화 조치를 적용하여 조합·분석

2 비식별화된 정보는 이용자 동의없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가능

- ▣ 비식별화 조치된 정보는 개인식별성이 없어 개인정보가 아니므로
현행법에서 요구하는 이용자 사전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음

3 빅데이터 처리 사실·목적 등에 대한 이용자 투명성 확보

- ▣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빅데이터 처리 사실·목적·수집 출처 및
이용자 거부권 행사 방법 등을 이용자에게 투명하게 공개

2. 주요 내용

4 민감정보 및 통신비밀의 수집·이용·저장·조합·분석·생성 등 처리 금지

- ❖ 특정 개인의 사상·신념, 정치적 견해 등 민감 정보의 생성을 목적으로 정보의 수집·이용·저장·조합·분석 등 처리 금지
- ❖ 이메일, 문자 메시지 등 통신 내용의 수집·이용·저장·조합·분석 등 처리 금지

5 수집된 정보의 저장·관리 시 ‘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’ 시행

- ❖ 비식별화 조치가 취해진 정보를 저장·관리하고 있는 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‘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’ 적용
- ❖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 설치, 접속 기록에 대한 위·변조 방지 조치,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·운영 등 악성프로그램 예방

4장

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 방향

1. 개선 방향 : 개인정보의 정의 합리화

문제점

❖ 빅데이터 산업을 가로막는 개인정보 정의

●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6호

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, 문자, 음성,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(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)를 말한다.

●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

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(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



잠재적 결합가능성만 있으면
비식별정보도 개인정보라고 정의

개선 방향(안)

❖ 개인정보의 재분류, 합리화 [예시]

●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

· 주민등록번호, 운전면허번호, 여권번호 등

● 개별적으로는 비식별정보지만 함께 처리되고 있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

· 이름, 주소, 전화번호, 신용카드번호, 계좌정보 등이 함께 처리되고 있을때

● 비식별정보라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추가 입수할 수 있는 정보를 고려 시, 식별성을 띄는 정보

· 이름, 주소, 전화번호, 신용카드번호, 계좌정보 등이 함께 처리되고 있을때

· 서비스 모델 상 사업수행 과정에서 추가 정보 입수가 예정된 경우



개인정보의 필수성 등에 따른
합리적 재분류 및 보호체계 차등화

2. 개선 방향 : 사전동의 규제의 합리화

문제점

❖ 현행 개인정보 '사전동의' 규제의 특징

- 이용자 동의가 예상되는 사항이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까지 동의 요구

· 정보통신망법 : 제22조, 제24조의2
· 개인정보보호법 : 제17조, 제18조

- 엄격한 변경 동의 의무, 이용 목적 고지 의무 등을 요구

· 정보통신망법 : 제22조제1항 단서

- 사전동의제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

· 정보통신망법 제71조 → 5년이하 징역, 5천만원 이하 벌금

➡ **개인정보의 활용이 제약, 빅데이터 관련
신규 서비스 개발 및 신규 비즈니스
모델 창출 등 어려움**

개선 방향(안)

❖ 과도한 사전동의 규제의 합리화

- 서비스 제공,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한 경우, 수집 및 제공과 관련한 사전 동의 개선

→ 명확한 고지를 통한 예견 가능성 제고 방안 모색 필요

- 엄격한 변경 동의 조항의 완화

→ 의사표시의 합리적인 해석 범위 내에서 또는 정당한 이익(혜택)의 제공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활용이 가능토록 동의 의무 완화

❖ 사전동의형에서 사후통제형으로 전환

→ 기업들이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, 세분화된 '개인정보이용설정' 기능 도입을 의무화
→ 이용자가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부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'개인정보이용설정' 페이지에서 이를 거부

➡ **엄격한 사전동의 제도 완화를 통한
활용 활성화**

3. 개선 방향 :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이용 근거 마련

문제점

- ❖ 비식별화 조치에 대한 법적 정의 부재
 - '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' 에서 비식별화 조치를 빅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으나, 법적 정의는 부재
- ❖ 사업자의 법적 의무 근거 부재
 -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조치 및 재식별 시 조치 의무 등의 법적 근거가 '정보통신망법' 에 부재

[참고]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제7항
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❖ 법적 의무 미이행 사업자 제재 근거 부재
 - 비식별화 조치 및 재식별 시 조치 의무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제재 근거 부재

개선 방향(안)

- ❖ 비식별화 조치의 법적 정의 규정 마련
 - [비식별화 조치]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수 없도록 하는 조치
 - ❖ 사업자의 법적 의무 근거 규정 마련
 -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조치 및 재식별 시 사업자 의무 이행 사항 마련

→ 개인정보의 수집 시 비식별화 조치하면 이용자 동의 없이 수집, 이용 가능
→ 비식별 정보의 처리 과정에서 개인식별성이 나타날 경우 지체없이 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화 조치 이행
- ➡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'비식별화' 개념 명시화 및 불확실성 최소화